

동서발전, 평양 인구 2배 쓸 '평화발전소' 구상

남북경협 이후 기대감 '술술'
연천·DMZ 등에 LNG 복합화력
새 화력발전소 건설 장기 목표도
정부 "협의하거나 검토한적 없어"

최근 남북정상회담 이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한 발전회사가 대북시장 진출 방안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제재 등이 먼저 해결돼야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사는 전력이 부족한 북한을 새로운 시장으로 보고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인 진출방안을 마련했다.

8일 한국동서발전이 더불어민주당 권철승 의원에 제출한 '발전분야 대북 협력 사업안'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북한에 단기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동서발전은 태양광과 풍력의 사업준비 기간이 3년 정도로 화력발전(6~8년)보다 짧아 당장 급한 북한의 전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23MW 규모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면 북한 주민 7만5000명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기로는 남북 접경지역인 연천군이나 비무장지대에 '평화발전소'를 짓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발전소는 북한의 산업시설 전력 공



동서발전 소속 울산 LNG복합화력 발전소. /뉴스

급용으로,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500MW급 복합화력발전 방식으로 구상됐다.

동서발전은 평화발전소가 평양 인구 260만명의 2배 인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로는 북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후보지로는 개성공단과 해주공업 단지에 인접한 해주, 원산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인근에 있는 원산, 광공업과 수산업 등이 발달한 김책 등 3곳을 검토했다. 300MW급 2기 또는 500MW급 2기를 건설해 북한 발전소 설비용량의 8%에 해당하는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766만 kW로 남한의 14분의 1 수준이며 실제 생산한 전력량은 239억kWh로 남한의 23분의 1에 불과했다.

동서발전은 북한의 오래된 화력발전소 보수 및 성능개선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 화력발전소 총 9기 중 8기가 30년 이상 됐고 설비용량은 2013년 기준 31.6%로 저조하다.

성능개선은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 예산과 시간이 덜 들어 단기간에 북한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명이 남은 오래된 발전소 설비를 북한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있다.

활용도가 낮아진 울산 1복합발전소를 북

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신규복합발전소를 대신 짓는다는 구상이다.

동서발전은 발전소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국내 교육시설에서 북한 엔지니어를 교육하고 기술을 전수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동서발전은 국내탄과 품질이 유사한 북한 무연탄을 강원도 동해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동해화력은 2007~2010년 북한 무연탄 13만8000t을 도입한 적이 있다.

동서발전은 북한 무연탄이 국제시세보다 저렴해 도입시 연료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다.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고 무연탄을 받는 거래 형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동서발전의 이 같은 대북사업안은 정부와 협의되지는 않았다.

정부는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소 전에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너무 앞서나간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정부는 북한에 발전소 건설을 검토한 바 없으며 동북발전 사업안을 협의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남북 접경지에 평화발전소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런저런 구상들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화할 수 있는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아직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평화발전소 건설 안은) 남북경협 여건이 충족됐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검토한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韓·中·日 비즈니스 서밋 3國 기업인 50여명 참석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케이단렌) 주최로 열리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국내 기업인 15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 기업인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경제단체를 대표해 참석할 예정이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 조성진 LG전자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5대 그룹 최고경영자(CEO)급 경영진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너경영인 중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맡고 있는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자열 LS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한다. 금융권에서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2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번 모임을 주관하는 일본 경제계에서는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련 회장을 비롯해 이와사 히로미치 미쓰이부동산 회장, 나카니시 히로아키 히타치 회장, 고가 노부유키 노무라홀딩스 회장 등이 참석한다.

대한상의는 "한·중·일 3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50여 명이 참석해 비즈니스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n@

현정은 진두지휘 속 현대그룹, 대북사업 10년 만에 재개

(현대그룹 회장)

'남북경협사업 TFT' 본격 가동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우선 점검
"그룹·계열사 핵심역량 총집결"



사업을 통해 남북 화해와 통일의 초석을 놓고자 했던 고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유지를 잘 받들어 계승해 나

가자"며 "남북경협사업 선도기업으로서 지난 20여 년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중하면서도 주도면밀하게 사업재개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은 물론 향후 7대 SOC 사업까지 남북경협사업 재개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TFT는 현대그룹의 핵심역량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 남북경협사업의 구심점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룹 TFT는 현대아산 대표와 그룹전략기획본부장이 대표위원으로 실무를 지휘하고, 계열사 대표들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실무조직으로 현대아산 남북경협 운영부서와 현대경제연구원 남북경협 연구부서, 전략기획본부 각 팀, 그룹커뮤니케이션실 등 그룹 및 계열사의 경험 전문가들이 역량을 총집결해 남북경협사업의 주요 전략과 로드맵을 짤 계획이다.

이 TFT 운영은 매주 1회 정기 회의를 열고 사안 발생 시 수시 회의를 소집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우선적으로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기존 사업들의 분야별 준비사항과 예상 이슈를 점검한다.

또 북측과 맺은 7대 SOC 사업권을 토대로 향후 전개할 다양한 남북경협사업을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현대아산에서는 대표이사를 팀장으로 하는 '남북경협재개준비 TFT'를 별도로 구성해 내부 관련 조직 정비 등 전사적인 세부 준비 작업에 들어간다.

현대그룹은 지난 1998년 금강산관광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개발, 개성관광 등 20여 년간 남북경협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000년도 8월에는 현대아산이 북측과

합의해 철도, 통신, 전력, 통관비행장, 금강산물자원, 주요 명승지 종합 관광사업(백두산, 묘향산, 칠보산) 등 7대 SOC 사업권 획득하고 원산·통천지구 협력사업 개발에 관한 합의서도 맺었다.

현대아산은 지난 2008년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금강산 관광객 195만 명과 개성 관광객 11만 명을 유치했다. 2000만 평의 개성공단 개발사업권을 확보해 1단계로 100만평 부지 조성공과 공장 건축, 숙박시설 운영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공사의 북측구간에 대한 자재와 장비를 공급하는 등 건설 인프라 분야에도 직접 참여했다.

현대그룹측은 "남북경협이 남북 관계 진전과 국제사회의 대북 분위기 호전 등의 따른 여건이 성숙돼야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지난 10년 사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와 확신으로 준비를 해온 만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뉴스 댓글조작 의혹' 네이버 오늘 추가대책... 근본 해결될까

한성숙 대표 직접 발표

'드루킹 사건'을 시작으로 댓글 조작 논란에 휩싸인 네이버가 댓글을 비롯한 뉴스서비스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발표한다.

네이버는 "뉴스 및 뉴스댓글 서비스와 관련하여 오는 9일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다"고 8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한성숙 대표이사와 유봉석 미디어서포트 리더가 참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네이버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 밝혀지며 사실상 댓글 조작을 방치했다는 책임에 대한 요구를 받아왔다.

이에 지난달 25일에는 24시간 동안 하

나의 계정으로 클릭할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를 50개로 제한하고 하나의 계정으로 동일한 기사에 작성할 수 있는 댓글 수는 3개로 제한하는 뉴스 댓글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대책도 댓글 조작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져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아웃링크 도입, 기사 선별·배열 금지, 여론조작을 시도한 사람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9일 네이버가 내놓은 두 번째 입장발표로 포털의 뉴스제공과 댓글 조작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본사 모습. /연합뉴스